

■ 논문 ■

유럽의 반이민 정서와 극우정당 지지율 관계 분석

오 정 은

I. 서론

요즘 유럽은 매일 수백 명에서 수천 명씩 밀려드는 난민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더블린규정에 명시된 ‘역내에서 망명신청 접수는 오직 한 국가(망명신청자가 처음 도착한 국가)에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역외지역에서 온 난민신청자가 대부분 EU 영역 경계지역에 위치한 남부 및 동부지역 회원국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체류 중인데, 이들이 머물고 있는 국가에서 그 많은 난민을 계속해서 수용하기 부담스러워하고, 다른 EU 회원국들은 자국으로 난민을 수용하는데 미온적이기 때문에, 난민 문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연일 유럽의 가장 중요한 뉴스로 다루어지는 형국이다.

유럽 각국 대표들은 EU 회원국들이 난민을 분산수용 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선뜻 자국으로 다수의 난민을 데려오는 것은 주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에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이민자 유입에 대한 자국민들의 반감에 있다. 이미 2000년대 중반에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다문화주의 실패를 선언했을 정도로 유럽 주요국에는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짙게 형성되어 있다. 유럽의 반이민 정서는 선거철마다 극우정당에 의해 확대재생산 되면서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졌다. 특히 최근에는 난민 사이에 테러리스트와 같은 사회 안전 위협 인물이 섞여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각국 정부가 난민수용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이민 정서는 오늘날 유럽에서 극우정당이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성장하는데 자양분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랫동안 명맥만 유지해오던 유럽 각국의 극우정당들이 1980년대부터 조금씩 지지층을 결집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부터는 제도권 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하는데, 이 과정에서 극우정당은 반이민 정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극우정당에게 반이민 정서가 성장의 발판이 되었지만, 이민자 수가 많거나, 반이민 정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언제나 극우정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본고는 EU 각국에 존재하는 이민자에 대한 반감과 극우정당의 영향력을 비교하면서, 유럽의 반이민 정서와 극우정당 지지율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최근 이민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우리나라에서 반이민 정서가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되어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반이민 정서 형성 배경

주변에 이민자가 있다고 해서 항상 반이민 정서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 전반에 반이민 정서가 형성되는 배경에는 일상생활에서 이민자를 자주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민자 수가 충분히 많고, 외관상 이민자가 사회 주류층과 구분되고, 이민자가 사회 주류층과 구분되는 생활방식을 고수한다는 특징이 있다.

반이민 정서의 기저에는 인종주의(racism)나 제노포비아(xenophobia) 심리가 형성되어 있다. 이 두 용어는 일반인 사이에 혼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서로 구분된다. 그리고 반이민 정서는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 심리를 포괄한다.

인종주의는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종 우월주의라는 편견에 토대를 둔

것으로, 제국주의 시대의 유산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생물학적 우열론을 주장하고, 선진국의 백인사회나 백인 중심 국가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제노포비아는 특별히 백인사회나 백인 중심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 아니며,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난다.¹⁾ 제노포비아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백인에 의한 인종주의처럼 상대에 대한 멸시의 감정 이외에도 나와 다른 상대에 대한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유럽인들은 인종주의에 대해 비과학적인 주장이라고 매도하려는 경향이 있다. 인종주의적 발언은 몰지각한 사람이나 하는 발언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하지만 유럽에서 인종주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인종이라는 용어에 고정불변의 생물학적 의미 이외에도 사회문화적 의미가 부여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종주의적 언행을 자행한다.

제노포비아적 주장에 대해서는 지식인들도 동조하는 경우가 있고, 공개석상에서 이 문제를 두고 진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노포비아 현상을 연구해 온 존스(Rachel B. Jones)는 제노포비아의 유형을 크게 배타적(exclusive), 소유적(possessive), 악성적(toxic)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제노포비아의 근원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배타적 제노포비아는 이방인은 근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 외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며, 소유적 제노포비아는 이방인이 공동체에서 직업, 교육, 세금, 의료 혜택 등을 누리려고 한다는 인식에서 발현된다. 그리고 악성적 제노포비아는 이방인이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가치체계와 자유 등을 파괴하려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²⁾

제노포비아적 사고가 현실에서 나타나는 방식을 기준으로 유형화 할 때는 민족상징 유형, 경제사회 유형, 혼합가중 유형으로 구분되기도

1) 임종현, 「유럽의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현상에 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16권, 1호(2006), 57쪽.

2) Rachel B. Jones, "Intolerable Intolerance: Toxic Xenophobia and Pedagogy of Resistance." *The High School Journal*, 95, 1(2011), p. 35.

한다.³⁾ 민족상징 유형은 배타적 제노포비아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특정한 종족, 민족, 인종 등이 타 종족, 민족 인종 등에 대해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는 정서나 의식으로 ‘우리’가 아닌 타자를 배제하는 현상이다. 이때 다르다는 인식은 타자에 대한 열등감이나 우월감의 발로인 경우가 많다. 유럽에서 이슬람에 대한 배타적 정서가 이슬람의 상징, 예컨대 공공장소에서 히잡 착용 금지나,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등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민족상징 유형으로 나타나는 제노포비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경제사회 유형은 소유적 형태의 제노포비아 의식이 현실화 된 것이며, 국가 구성원인 시민에게만 공공의 혜택이 제공되어야 하고, 이민 온 이민자들이 이러한 공공재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전제한다. 이민자가 범죄, 질병, 고용, 사회보장제도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주민과 이민자의 공공재 사용 진입을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타나난다. 유럽에서 경제위기시에 이민자 배척 움직임이 강해지는 것이 그 예다. 혼합가중 유형은 악성적 제노포비아 인식이 현실화 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적 폭력, 테러 등에 대해 또 다른 폭력을 사용하면서 다문화 상황이 공존보다는 분리를 추구하고 문화적 갈등과 물리적 충돌이 혼재하는 양상을 나타낸다.⁴⁾

유럽에서 반이민 정서는 제노포비아 심리를 통해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제침체에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한정된 자원과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민자가 경쟁에서 이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슬람교도에 대한 불안감이 반이민 정서로 발전한 것도 기독교 문화와 상이한 문화권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유럽인의 반이민 정서가 인종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이민자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백인 유럽인과 구분되는 유색인종에 대한 멸시가 혼합되어 표출된다. 비록 세력이 크지는 않지만 네오나치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선거 때마다 이들에게 투표하는 유권자가 있다는 사실은 유럽사회에 인종주의가

3) 김용신, 「제노포비아에서 포용으로: 다수로부터의 하나」, 『비교민주주의 연구』, 8집, 2호(2012), 167-170쪽.

4) 위의 논문.

여전히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요컨대 유럽의 반이민 정서에는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가 결합되어 있다.

Ⅲ. 극우정당의 반이민 노선 채택

유럽에서 반이민 정서가 등장한 것은 오래 전부터였다. 19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드레퓌스 사건으로 제3공화정이 위기에 빠질 정도로 극심한 사회분열을 겪은 것이나, 1930~40년대 나치의 유대인 말살정책에 독일인들이 동참한 것은 유대인을 향한 유럽인들의 반이민 정서가 사회현상으로 표출된 사례였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구 식민지출신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민자가 관련된 사건 사고들도 증가했는데, 이민자가 연루된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곤 했다. 하지만 20세기까지 유럽의 반이민 정서는 널리 확산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의 뇌리에서 곧 잊혀졌다. 일시적으로 고조되다가 곧 잠잠해지면서, 한 때의 분위기처럼 치부할 수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유럽 반이민 정서는 그 이전과 성격이 달라졌다. 특정 사건을 계기로 고조된 반이민 주장들이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세련된 논리로 발전하였다. 반이민 구호에 지속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안정적인 지지층도 형성되었다. 그 배경에는 극우정당의 역할이 있었다.

과거 유럽의 극우정당 가운데에는 이민자 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1980~90년대에 대부분의 유럽 극우정당들은 이민문제를 당의 주요 강령으로 채택하였다. 당시 극우정당들이 반이민 논리를 채택한 이유는 유럽 경제침체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던 상황에서 경기침체의 원인을 이민자 탓으로 돌리는 주장에 유권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일부 국가에서 반이민 구호를 통해 지지층 결집에 성공하는 극우정당 사례가 이웃 국가의 극우정당들은 반이민 논리를 채택하도록 자극하는 효과도 있었다. 이후 극우정당들은

경기상황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반이민 구호를 외치며 반이민 정서를 지지층 확대의 도구로 활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1년 미국 9·11 테러가 발생하자, 반이민 주장과 유럽 극우정당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9·11테러 직후 서방 국가 사이에 이슬람교도를 혐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는데, 유럽에서는 이민자 가운데 북아프리카나 아시아지역 출신 이슬람교도가 많았기 때문에, 반이슬람 정서가 반이민 정서로 발전했다. 극우정당들은 대중의 제노포비아 심리를 자극하면서 유럽의 안전을 구실로 이민자 유입에 반대하고 이민자에 대한 통제 공약으로 유권자 지지를 호소했다. 이러한 전략은 성공적이었고, 유럽의 다수 국가에서 극우정당이 주요 정당으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제도권 진입을 넘어 집권하는 극우정당이 등장했다.

오늘날 유럽 극우정당들은 모두 반이민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치 반이민 노선 채택 여부가 극우정당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기준이 된 듯하다. 그러나 원래 반이민 입장 여부가 극우정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었다. 1995년에 뮈더(Cas Mudde)는 당시 극우정당의 정의를 시도하는 주요 논문 26편을 분석하고, 해당 논문에서 극우정당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요소로서 자주 등장하는 이데올로기를 민족주의(nationalism), 인종주의, 제노포비아, 반민주주의(anti-democracy), 강한국가론(strong-state) 등 다섯 가지로 정리했었다.⁵⁾ 이 가운데 민족주의를 핵심 요소로 꼽은 글은 22편이고, 제노포비아 21편, 인종주의 19편, 반민주주의 19편, 강한국가론이 19편이었다.⁶⁾ 당시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가 극우정당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긴 했지만, 필수요소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여전히 극우정당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학자마다 다양한

5) Cas Mudde, "Right-wing Extremist Analyz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deologies of Three Alleged Right-Wing Extremist Parties (NPD, NDP, CP'86)",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27, 2(1995), p. 206.

6) *Ibid.*, , pp. 206-209.

방식으로 극우정당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⁷⁾ 오늘날 극우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하는 요건이 무엇이라고 단정적으로 지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반이민 주장이 유럽에서 극우정당을 규정할 때 사실상 필수 조건이 되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 1980~90년대를 거치며 유럽에서 극우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모두 반이민 주장을 핵심 강령으로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오스트리아의 제 3당 지위를 누리고 있는 오스트리아 극우정당 오스트리아자유당(Freiheitliche Partei Österreichs: FPÖ)은 국가통제 반대를 핵심강령으로 하던 정당에서 1990년대 초반에 반이민 정당으로 돌아섰고,⁸⁾ 1972년 설립되어 1995년 다수의 당원들이 덴마크 인민당(Dansk Folkeparti: DF)을 설립하여 탈당할 때까지 덴마크의 대표적인 극우정당이었던 극우정당 개혁당(Fremskridtspartiet)도 1980년대에 반이민 성격을 추가하였다.⁹⁾ 프랑스를 대표하는 극우정당 국민전선(Front Nationale: FN)도 1980년대에 반이민 성격을 강화하였고, 1978년 설립되어 2005년 플레미시이익(Vlaams Belang: VB)으로 당명을 개정한 벨기에 극우정당 플레미시블록(Vlaams Bloc: VB)은 1986년 프랑스의 FN의 선거승리에 자극받아 한층 공격적인 반이민 강령을 제시하였다.¹⁰⁾ 이탈리아의 극우정당 북부동맹(Lega Nord: LN)도 1990년대 초에 당의 차별화 전략으로 반이민 논리를 발전시켰다.¹¹⁾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랜 침체기를 겪었던 유럽 극우정당들이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반이민 주장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에서

7) Christina S. Liang, *Europe for the Europeans: Th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of the Populist Radical Right* (Farnham: Ashgate Publishing, 2007), pp. 3-6.

8) Herbert Kitschelt, *The Radical Right in Western Europe: A Comparative Analysi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5), p. 91.

9) *Ibid.*

10) Marc Swyngedouw, "The Extrem Right in Belgium: of a Non-existent Front National and Omnipresent Vlaams Blok." in Betz, Hans-Georg and Immerfall, Stefan (eds.), *The New Politics of the Right: Neo-populist Parties and Movements in Established Democracie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8), pp. 67-68.

11) Piero Ignazi, *Extreme Right Parties in Western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 9.

극우정당은 이미 19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행동(Action Française)이라는 극우정당이 활동했을 정도로 역사가 깊고, 세계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는 주요 국가에서 극우정당이 집권하거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나치의 만행을 떠올리는 유럽시민들이 극우정당을 외면하면서 오랫동안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는 실정이었다. 1980년대부터 일부 국가에서 극우정당이 반이민 정서를 조장하며 지지율이 상승했고, 이것이 현재까지 극우정당이 세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이 경제 불황기를 맞이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자 일부 극우정당들이 제한된 자원과 일자리를 이민자 탓으로 돌리며 유권자의 표를 얻었고, 이웃 국가의 극우정당의 선전에 자극받은 극우정당들이 반이민 노선을 강화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성공하는 사례가 많았다.

코크레인과 네비트(Cochrane & Nevitte)는 1980년부터 2008년까지 OECD 20개 국가에서 반이민 정서에 호소하는 극우정당들의 선거 득표율 변화를 추적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유럽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에 득표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¹²⁾ 예컨대, 오스트리아의 FPÖ는 1983년 선거에서 5.0%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1986년 9.7%, 1990년 16.6%, 1994 22.5%로 득표율이 상승했다. 벨기에의 VB는 1981년 선거에서 1.1%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1985년 1.4%, 1987년 1.9%의 득표율을 기록하다가 1991년 6.6%, 1995년 7.8%, 1999년 9.95%, 2003년 11.7%, 2007년 12.0%로 지지율이 상승했다. 프랑스의 FN은 1981년 선거에서 득표율 0.0%를 기록했지만, 1986년 9.7%, 1988년 9.6%, 1993년 12.3%, 1997년 14.9%, 2002년 11.1% 등의 득표율을 기록했다.¹³⁾

코크레인과 네비트의 조사에 이어 최근까지 유럽 각국 선거에서 극우정당 득표율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즉, <표 1>은 1980년부터 2015년 10월 현재까지 유럽 주요국 극우정당의 선거 득표율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12) Christopher Cochrane & Neil Nevitte, "Scapegoating: Unemployment, Far-Right Parties, and Anti-Immigrant Sentiment", *Comparative European Politics*, 12, 1(2014), pp. 10-12.

13) *Ibid.*, pp. 10-12.

일부 국가에서 극우정당이 지속적인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유럽 주요국 극우정당의 선거 득표율 변화(1980-2015)

국가	연도별 득표율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오스트리아 FPÖ	1983	1986	1990	1994	1995	1999	2002	2006	2008	2013		
	5.0%	9.7%	16.6%	22.5%	21.9%	26.9%	10.0%	11.0%	17.5%	20.5%		
벨기에 BV	1981	1985	1987	1991	1995	1999	2003	2007	2010	2014		
	1.1%	1.4%	1.9%	6.6%	7.8%	9.9%	11.7%	12.0%	7.8%	3.7%		
덴마크 FRP DF	1981	1984	1987	1988	1990	1994	1998	2001	2005	2007	2011	2015
	8.9%	3.6%	4.8%	9.0%	6.4%	2.4%	0.5%	0.5%	-	-	-	-
핀란드 PS	1983	1987	1991	1995	1999	2003	2007	2011	2015			
	-	-	-	1.3%	1.0%	1.6%	4.1%	19.1%	17.7%			
프랑스 FN	1981	1986	1988	1993	1997	2002	2007	2012				
	0.2%	9.8%	9.8%	12.7%	14.9%	11.1%	4.3%	13.6%				
독일 NPD	1980	1983	1987	1990	1998	2002	2005	2009	2013			
	0.2%	0.2%	0.6%	0.3%	0.3%	0.4%	1.6%	1.5%	1.3%			
이탈리아 LN	1983	1987	1992	1994	1996	2001	2006	2008	2013			
	-	-	8.7%	8.4%	10.0%	3.9%	4.6%	8.3%	4.1%			
네덜란드 CP/CD LPF PVV	1981	1982	1986	1989	1994	1998	2002	2003	2006	2010	2012	
	-	0.8%	0.4%	0.9%	2.5%	0.6%	-	-	-	-	-	-
	-	-	-	-	-	-	17.0%	5.6%	-	-	-	-
스웨덴 NyD SD	1982	1985	1988	1991	1994	1998	2002	2006	2010	2014		
	-	-	-	6.7%	1.2%	-	-	-	-	-	-	-
영국 BNP	1983	1987	1992	1997	2001	2005	2010	2015				
	0.0%	0.0%	0.1%	0.1%	0.2%	0.7%	1.9%	0.0%				

자료: Cochrane & Nevitte (2014) 및 각국 총선결과 자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극우정당의 영향력은 한층 강화되었다. 2000년 2월 오스트리아에서 극우정당인 FPÖ가 오스트리아인민당 (Österreichische Volkspartei: ÖVP)과 연정을 통해 집정권당이 되었고, 2002년 4월 프랑스 극우정당인 FN은 창립자이자 당대표인 Jean-Marie

Le Pen을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시켜 1차 경선 2위를 기록하고 결선투표에 진출시켰다. 2002년 5월 네덜란드 총선에서는 신생 극우정당인 펴프포르퇴인 리스트당(Lijst Pim Fortuyn: LPF)이 전체 150석 가운데 26석을 차지하여 제 2정당이 되고, 제 1당인 기독교민주당(Christen-Democratisch Appèl: CDA), 제 3당인 자유민주당(Volkspartij voor Vrijheid en Democratie: VVD)과 연대하여 연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유럽 각국에 경제불황이 시작되면서 극우정당은 다시 한 번 세력 강화의 기회를 맞이했다.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률 증가의 원인을 이민자가 원주민의 일자리를 뺏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중들이 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가지도록 선동했다. 현재도 극우정당의 주장은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유럽인들에게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EU는 유럽 전역에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EU차원의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 감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¹⁴⁾ 하지만 유럽 각국의 극우정당들은 EU차원의 정책이 자국의 경제침체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민자유입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이민 구호를 반EU 논리와 결부시키는 방식으로 EU차원의 반이민 대응을 공격했다. 반이민과 반EU의 결합은 유럽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유럽시민들을 극우정당의 지지층으로 흡수하는 효과를 낳았고, 극우정당의 지지층이 더욱 두터워지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5년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졌고, 당시 세계 언론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의 돌풍할 것을 예견했다.

IV. 2014년 유럽의회 선거와 극우정당

14) EU는 1997년 유럽 각국의 인종차별과 제노포비아 실태를 감시를 위해 유럽 인종주의·제노포비아 감시센터(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Racism and Xenophobia: EUMC)를 설립하였고, 2007년에는 EUMC를 계승하여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와 관련하여 감시 이외에도 연구, 출판 등 다양한 사업 전개하는 유럽연합기본권사무소(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FRA)를 설립하여 운영 중임. FRA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 소재.

2014년 5월 22~25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는 유럽 극우정당들이 유럽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는 기회였다. 유럽의회 선거는 5년에 한 번씩 5~6월경에 실시되며, EU회원국 전역에서 유럽시민의 직접선거로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유럽의회는 EU의 각료이사회와 함께 EU차원의 법규 제정을 결정하는 입법권을 가지고, EU차원에서 집행되는 정책에 대해 감독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향후 EU정책 방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유럽의회 의석수는 EU회원국별 인구를 고려하여 국가 당 최소 6석부터 최대 96석까지 배정하여 총 751석이다.¹⁵⁾ 2014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각종 매체와 전문가들은 극우정당들이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표를 얻을 것인가를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포인트 중 하나로 꼽았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극우정당이 내세우는 구호와 공약은 미디어를 통해 유럽 시민들에게 전달되었다.

EU회원국 정당들은 유럽의회에서 유사한 정치적 노선을 표방하는 정당끼리 연대하여 정치그룹을 형성하고 원내 공동의 입장을 표방하는데,¹⁶⁾ 28개 EU 회원국 가운데 최소 7개국 출신 25명의 의원을 배출한 연대정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1979년 유럽의회 직접선거가 시작된 이래 그동안 유럽의회에서 극우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적은 없었으나, 2014년 유럽의회 선거를 통해 극우정당이

15) 유럽의회 의석수는 신규 회원국 가입이나 EU 조약 개정 과정에서 재조정되곤 한다. 2014년 선거에 배정된 국가별 유럽의회 의석수는 독일 96석, 프랑스 74석, 영국과 이탈리아 각각 73석, 스페인 54석, 폴란드 51석, 루마니아 32석, 네덜란드 26석, 벨기에, 체코,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각각 21석, 스웨덴 20석, 오스트리아 18석, 불가리아 17석, 덴마크, 슬로바키아, 핀란드 각각 13석,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각각 11석,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각각 8석,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룩셈부르크, 몰타 각각 6석이다.

16) 2014년 9월 30일 현재 유럽의회에 형성된 정치그룹은 유럽국민당(European People's Party; EPP), 유럽사회당(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and Democrats: S&D), 유럽자유민주연대(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for Europe: ALDE), 녹색당/유럽자유연대(Group of the Greens/European Free Alliance: GREEN/EFA), 유럽보수개혁당(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ECR), 유럽통합좌파/북유럽녹색좌파 그룹(European United Left/Nordic Green Left: GUE/NGL), 자유유럽-민주그룹(Europe of freedom and direct democracy Group: EFDD)이며,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은 일반적으로 비정파(Non-attached Member: NI)로 지칭된다.

유럽의회에서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었다.

사실 그 이전까지 유럽 각국의 극우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것은 유럽의회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었지만, 국가주의·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각국 극우정당들이 국경을 초월한 연대를 통해 유럽의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데 소극적인 이유도 있었다. 그런데 2014년 선거를 앞두고는 극우정당 사이의 연대가 성사되어 극우정당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 예측은 실현가능한 것처럼 보였다.¹⁷⁾

유럽 극우정당의 연대는 2013년 11월 13일 네덜란드의 극우정당인 PVV의 당대표 헤이르트 빌더스(Geert Wilders)가 프랑스 극우정당 FN의 대표 마린 르펜(Marine Le Pen)과 만나 2014년 유럽의회 선거를 위한 양국의 연대를 합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연대는 파격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극우정당들의 기본 강령은 국가주의·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채택하고 EU 통합에 반대하는 것인데 국가단위를 넘어 유럽차원의 정당간 연대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EU 통합 진전이 개별국가의 정책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장기간 경기 침체와 외국인 유입을 조장하는 상황에서 연대를 통해 반이민 반EU를 관철하겠다는 논리로 국제연대를 성사시켰다.

유럽 극우정당의 연대를 처음 제안한 것은 프랑스의 FN였다. FN의 창립자이자 초대 당수였던 장 마리 르펜(Jean-Marie Le Pen)의 딸로서 2011년 FN의 당수가 된 마린 르펜은 취임 후 과거 극우정당이 보유한 강경한 이미지를 탈피하며 온건한 행보를 보이며 지지자를 확충했으며, 프랑스를 넘어 유럽에서 극우정당 지지자 확대를 위해 극우정당들의

17) Nicholas Watt, "Ukip's Nigel Farage shocks own party with call to let in Syrian refugees," *The Guardian*, 29 December 2013; Christopher Hope. "Let Syrian refugees come to Britain, says Nigel Farage". *Telegraph*, 29 December 2013; Alex Wickham. "The Real Racists: UKIP is the only party that doesn't discriminate against non-whites". *Breitbart*. 27 April 2014.

연대를 위해 나섰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PVV와 처음으로 연대에 합의했다. 곧이어 FN-PVV 연대는 영국의 영국독립당(UK Independence Party: UKIP)과도 연대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UKIP는 정치노선의 차이를 이유로 2014년 4월 19일 공식적으로 연대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UKIP는 반EU 노선을 견지하고 우파 성향이긴 하지만, 극우정당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민자 정책에 관해서도 UKIP는 영국이 기독교도인 시리아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이민 입장을 분명히 하는 다른 극우정당과 차이를 보였다.

극우정당들의 연대 움직임에 대해 주장이 강하고 성향이 다른 각국 극우정당의 대규모 연대가 가능할지, 연대하더라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유럽의회 선거 직후인 5월 28일 마테오 살비니(Matteo Salvini) 이탈리아 NL 대표, 헤럴드 빌립스키(Harald Vilimsky) 오스트리아 자유민주당(FPÖ) 의원, 마린 르펜 프랑스 FN 대표, 헤이르트 빌더스 네덜란드 PVV 대표, 헤로프 아네만스(Gerolf Annemans) 벨기에 플레미시이익당(VB) 대표 등이 28일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만간 FN을 중심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임을 밝혔지만, 교섭단체 결성 신고 1차 시한인 2014년 6월 24일에 르펜 FN대표는 유럽 극우정당 교섭단체 실패를 발표하였다.¹⁸⁾ 르펜 대표는 앞으로도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의회에서 극우정당들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은 성공하지 못했다. 유럽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정파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회기 도중에 교섭단체 결성도 가능하지만, 민족주의 의식이 강한 극우단체들이 유럽 차원에서 연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정당 차원에서 살펴보면, 일부 극우정당들은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의 FN으로, 24.9%의 득표율로 프랑스에 배정된 전체 유럽의원 의석 74석 가운데 24석을 차지하면서, 기존의 프랑스 제 1당과 제 2당을 제치고 프랑스 정당 가운데

18) Kim Willsher and Ian Traynor, "Marine Le Pen fails to form far-right bloc in European parliament," *The Guardian*, 24 June 2014.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헝가리의 Jobbik도 14.7%의 득표율로 3석을 차지하여, 기존의 헝가리 제 2정당인 헝가리사회당(Magyar Szocialista Párt: MSZP)를 제치고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 헝가리 정당이 되었다. 오스트리아의 FPÖ도 2009년 선거에서 12.7% 득표율로 2개 의석을 차지하던 데에서 2014년에는 19.7% 득표율로 4개 의석을 차지했다. 핀란드 극우정당인 진정한 핀란드인(PS)도 12.9%의 표를 얻음으로써 기존에 유럽의회에서 1석을 차지하던 데에서 2석으로 의석을 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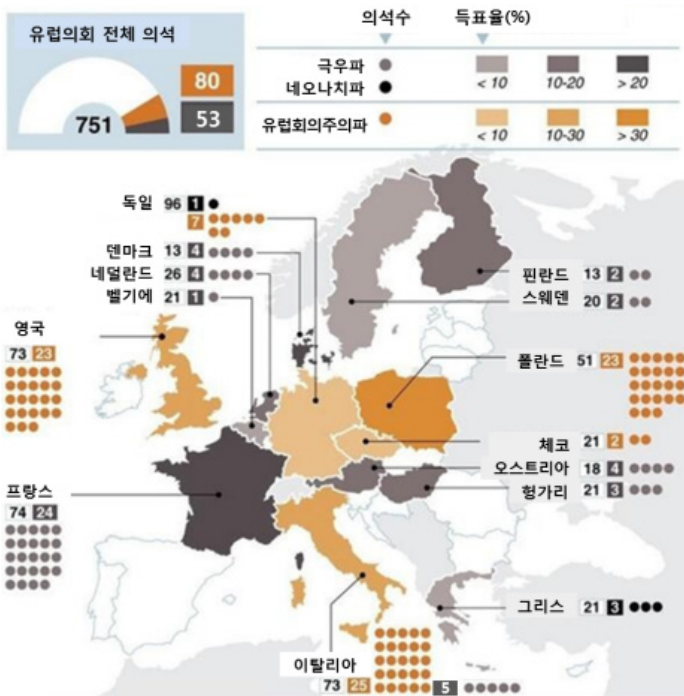
유럽 극우 정당 가운데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유럽의회에 진출하는 쾌거를 올린 경우도 많았다. 네오나치계열로 분류되는 그리스의 극우정당 황금새벽당(Chrysi Avgi)이 9.4%의 득표율로 그리스에 배정된 21석 가운데 3석 차지하며 유럽의회에 입성했고, 스웨덴 민주당(SD)이 9.7%의 득표율로 유럽의회의 2개 의석을 차지하였다. 독일에서는 국내 선거에서도 의석을 차지한 적이 없었던 네오나치계열 극우정당 민족민주당(NPD)이 1.0% 득표율로 유럽의회의 1석을 차지하였다.

2014년 유럽의회 선거 이후 국내외 많은 언론은 극우정당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압승했다고 보도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다. 극우정당 압승을 주장하던 매체들이 유럽회의주의를 표방하는 정당과 극우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극우정당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극우정당이 반이민과 더불어 반EU를 주장했지만, 반EU를 표방하는 정당이 모두 극우정당은 아니다. 좌파 계열의 정당들 가운데에도 유럽통합을 반대하고 반EU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반EU를 주장하는 우파 계열 정당 중에도 민족주의만 강조할 뿐 반이민 정서를 표방하지 않는 정당이 있다. 이러한 정당을 모두 극우정당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림 1>은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반EU를 주장하였던 정당들을 극우주의 정당과 유럽회의주의 정당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극우정당 가운데 명시적으로 네오나치즘을 표명하는 경우는 일반 극우파와 구분하여 네오나치파로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극우파와

네오나치파는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에서 모두 극우에 속하고 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표명하기 때문에 함께 극우정당이라 칭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기준으로 극우정당의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751석 가운데 극우정당이 차지한 의석은 53석이다. 53석을 획득한 것도 의미있는 결과이긴 하지만, 이 결과를 두고 극우정당이 유럽의회를 좌우할 것처럼 비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림 1> 2014년 유럽의회 유럽회의주의파와 극우파 정당 의석 수



주: 네모 안 숫자는 유럽의회 의석수 의미.

자료출처: 유럽의회 홈페이지와 EU 28개 회원국 정당소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http://www.elections2014.eu>(검색일: 2015년 8월 16일)

2014년 유럽의회 선거는 유럽의 일부 극우정당에게 다시금 지지층을 결집하는 기회가 되었지만, EU 역내 모든 극우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었다. 네덜란드 PVV는 선거 직전까지 많은 매체들이 PVV가 네덜란드 정당 가운데 유럽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곤 했지만, 오히려 2009년 유럽의회 선거 때보다 3.5% 낮은 13.3%의 득표율로 4개 의석을 차지하여 네덜란드 정당 가운데 3위에 머물렀다. 이탈리아의 극우정당인 NL도 2009년 10.2%의 득표율로 전체 이탈리아 의석 72석 가운데 9개 의석을 차지했던데 비해 2014년에는 6.2%의 득표율로 이탈리아 73개 의석 가운데 5개 의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벨기에의 극우정당 VB도 2009년에 15.9%의 득표율로 당시 벨기에 의석 22석 가운데 2석을 차지했던데 비해 2014년에는 6.8%의 득표율로 21석 가운데 1석을 차지하여 5년 전 선거보다 지지층을 잃었다. 그리고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이번 선거에서 극우정당 출신 유럽의원이 배출하지 못했다. 언론들이 극우주의자의 반이민 주장이 유럽을 전역을 뒤덮은 것처럼 묘사하곤 했지만, 실제로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극우정당의 반이민 주장과 거리를 둔 유럽인도 많았다.

2014년 유럽의회 선거로 유럽 극우정당의 유럽의회 진출은 증가했지만, 극우정당들이 유럽의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을 못한 상황에서 유럽 차원의 정책에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2014년 선거 결과로 인해, 이후 5년동안 유럽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극우정당들이 자국에서 대 EU정책을 논할 때, 발언권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 배정된 전체 유럽의회 의석 74석 가운데 FN이 24석을 얻어, 20석을 차지한 대중운동연합(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UMP)과 13석을 차지한 사회당(Parti socialiste: PS)을 따돌리고 1위를 기록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가 추후 EU에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극우정당이 이전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1위는 아니었지만 이전 선거에 비해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헝가리의 Jobbik과 오스트리아의 FPÖ, 핀란드의 PS도 과거보다 EU차원의 정책과 관련하여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V. EU 회원국 극우정당 현황

앞서 언급했듯, 2차 세계대전 이후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의 침체기를

겪었던 유럽 극우정당들은 1980년대부터 선거에서 유의미한 득표율을 기록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연정에 참여할 정도로 세력이 확장되었다. 하지만 극우정당의 영향력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표 2>는 2015년 10월 5일 현재 28개 EU회원국의 극우정당 현황을 보여준다. 국가별로 가장 최근에 치러진 총선 결과를 통해 극우정당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국가별 지지율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EU회원국의 극우정당 현황

국가	당명	설립연도	득표율(%) ¹⁾	의석수
오스트리아	Freiheitliche Partei Österreichs (FPÖ)	1956	20.5 (2013)	40/183
핀란드	Perussuomalaiset (PS)	1995	17.7 (2015)	38/200
헝가리	Jobbik	2003	20.5 (2014)	23/199
라트비아	Nacionālā apvienība (NA)	2010	13.9 (2011)	14/100
프랑스	Front National (FN)	1972	13.6 (2012)	2/577
덴마크	Dansk Folkeparti (DF)	1995	21.1 (2015)	37/179
네덜란드	Partij voor de Vrijheid (PVV)	2006	10.1 (2012)	15/150
룩셈부르크	Alternativ Demokratesch Reformpartei (ADR)	1987	6.6 (2013)	3/ 60
벨기에	Vlaams Belang (VB)	2004	3.7 (2014)	3/150
불가리아	Ataka	2005	7.3 (2013)	23/240
리투아니아	Tvarka ir teisingumas (TT)	2002	6.9 (2012)	18/300
그리스	Χρυσή Αυγή (XA: ChrysiAvgi)	1985	6.3 (2015)	17/300
스웨덴	Sverigedemokraterna (SD)	1988	12.9 (2014)	49/349
슬로바키아	Slovenská národná strana (SNS)	1989	4.6 (2012)	0/150
이탈리아	Lega Nord (LN)	1991	4.1 (2013)	20/630
크로아티아	Hrvatska stranka prava (HSP)	1990	3.0 (2011)	0/151
영국	British National Party (BNP)	1982	0.0 (2015)	0/650
슬로베니아	Slovenska Nacionalna Stranka (SNS)	1991	1.8 (2011)	0/ 90
루마니아	Partidul România Mare (PRM)	1991	1.5 (2012)	0/137
독일	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NPD)	1964	1.3 (2013)	0/630
사이프러스	Εθνικό Λαϊκό Μέτωπο (Ethniko Laiko Metopo, ELAM)	2008	1.1 (2011)	0/460
체코	Dělnická strana sociální spravedlnosti (DSSS)	2010	0.9 (2013)	0/200

유럽의 반이민 정서와 극우정당 지지율 관계 분석

에스토니아	Eesti Iseseisvuspartei (EIP)	1999	0.2 (2015)	0/101
포르투갈	Partido Nacional Renovador (PNR)	2000	0.5 (2015)	0/230
스페인	España 2000	2002	0.04 (2011)	0/350
아일랜드	None	-	-	-/166
폴란드	None ²⁾	-	-	-/460
몰타	N/A ³⁾	N/A	N/A	-/ 69

주:1) 2015년 10월 5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치러진 총선 결과.

괄호 안은 가장 최근 총선이 치러진 연도.

2) 2001년에 극우정당 Liga Polskich Rodzin(LPR)이 설립되어 2005년 총선에서 8.0%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2007년 총선 실패 후 해체.

3) 정당등록제가 존재하지 않아 총선에서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정당유무를 알 수 없음.

자료: EU 28개 회원국별 정당소개 자료와 총선 결과 보도 자료를 토대로 정리.

각국에서 가장 최근에 치러진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덴마크, 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는 극우정당이 20%를 넘는 득표율을 보였을 정도로 국내 유권자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핀란드, 라트비아,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도 유권자로부터 1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절반인 14개국에서는 극우정당이 국회에서 단 1석의 의석도 차지하지 못한 상태이다.

2015년에 치러진 선거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28개 EU 회원국 가운데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크로아티아 등 9개국에서 총선이 치러지고, 이 가운데 2015년 10월 5일 현재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폴란드, 영국, 스페인 등 7개국 선거를 치렀다. 그리고 핀란드, 덴마크, 그리스 등에서는 극우정당이 승리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즉, 핀란드에서 극우정당인 핀란드민족당(Perussuomalaiset: PS)이 17.7%의 득표율로 제2정당에, 덴마크에서도 덴마크인민당(Dansk Folkeparti: DF)이 21.1%의 지지율로 제2정당에 올랐다. 그리스에서도 극우정당인 황금새벽당(Χρυσή Αυγή: XA)DL 6.3%의 득표율로 제 3정당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앞서 설명했듯, 극우정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사용하는 핵심 주장은

반이민이다. 그런데, 국가별 이민자 비율과 극우정당의 지지도는 일치하지 않는다. 예컨대, 독일은 외국인 비율이 9.6%에 이르는데¹⁹⁾ 극우정당에 대한 유권자 지지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가장 최근 총선에서 독일 극우정당 득표율은 1.3%에 불과했다. 스페인도 외국인 비율이 10.9%에 이르렀지만, 극우정당 득표율은 0.04%라는 미약한 수준이다. 포르투갈도 외국인이 4.0%를 차지하지만 최근 선거에서 극우정당 득표율은 0.3%였다. 벨기에는 외국인 인구가 11.2%에 이르고 매년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이민자 수와 반이민 정서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뮈더(Mudde)는 유럽인 다수가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극우정당의 득세 원인을 사회환경이나 유권자의 영향, 즉 수요차원의 문제 보다는 정당의 선거 동원 전략이라는 공급차원의 문제에서 찾는다.²⁰⁾ 유럽 각국 상황을 비교하면, 이러한 주장에 수긍하게 된다. 유럽에서 반이민 정서 확산이 이민자의 수보다는 정당 전략 차원에서 반이민 정서를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는 극우정당의 역량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I. 결론: 한국에 주는 시사점

국제화·세계화의 진행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생활하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이민자 수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이민 정서의 형성과 확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기 쉽다. 반이민 정서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반이민 정서의 근원을 이해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민자를 수용하고 이민자 문제를 고민했던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면 반이민 정서는 이민자 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19)Eurostat 홈페이지 <http://ec.europa.eu/eurostat> (검색일: 2015년 8월 10일)

20)Cas Mudde, "Populist Radical Right: A Pathological Normalcy", *West European Politics*, 33-6(2010), pp. 1178-1180.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고, 극우정당의 조직적인 노력에 따라 발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유럽의 극우정당은 한때의 분위기에 휩쓸려 이민자를 막연히 경계하곤 하던 사람들에게 이민자를 멀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했고, 반이민 정서를 공유하는 유권자 세력을 형성했으며, 반이민 정서를 공고한 사회적 이데올로기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반이민 구호를 외치는 극우정당이 항상 지지층 확대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민자 수가 많은 국가에서도 극우정당의 영향력이 미미한 경우도 있다.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 국가들은 과거 나치즘과 파시즘을 동조하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 경험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은 시민들이 일견 그럴듯해 보이는 극우의 논리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냉정하게 접근하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세 국가뿐만 아니라 EU 회원국의 절반 정도가 극우정당의 돌풍이 예견되던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 출신에게 한 자리의 의석도 허용하지 않았다.

유럽의 반이민 정서와 극우정당의 관계는 최근 반이민 정서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부터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여, 2015년 10월 현재 약 200만명의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다.²¹⁾ 초기에 한국사회는 이민자에게 온정의 손길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이민자에 대해 반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일부는 이른바 ‘반다문화’를 주장하면서 온라인상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정부의 이민자 지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이민자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다문화정책반대’, ‘다문화바라보기 실천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 시민연대’, ‘단일민족 코리아’,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 등 다수의 온라인 사이트들이 애국애족주의를 빙자한 반이민 주장을 하며 활동하고 있다. 오프라인 상의 시위도 있었다. 2007년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앞에서 오프라인상의 반이민 시위가 있었고,²²⁾ 2013년에는 영종도에 정부가 가칭 ‘난민센터’라는 이름으로 난민지원기관 설립을 추진하자, 지역주민들이 공사현장에 몰려가 센터 개소에 격렬히 항의했다. 난민센터는 오랜 표류 끝에 결국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개소해야 했다. 이민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친다문화 주장에 비하면

2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가장 최근의 외국인 통계자료인 2015년 9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5년 9월 30일 기준으로 국내체류 외국인의 공식적인 통계수치는 1,874,614명이다.

22) 김용신, 「제노포비아에서 포용으로: 다수로부터의 하나」, 170-171쪽.

반다문화 주장은 아직 소수의견이다. 하지만, 이민자가 연루된 범죄 등 이민자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반이민 정서는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구성원들은 나치즘이나 파시즘과 같은 극단적 민족주의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험이 없고, 오랫동안 단일민족 신화를 교육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극우주의, 민족주의를 애국심을 혼동하기 쉽다. 이민자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다면, 극우주의자들이 이민자에 대한 반감과 이민자로 인한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쉽다.

유럽의 사례는 반이민 정서 발전이 이민자 수 증가에 따른 필연적 현상이 아니며, 극우주의자들의 의도적인 노력때문에 증폭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반이민 주장을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민의식으로 무분별한 반이민 주장 확산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서 반이민 정서 확산으로 사회갈등과 불안이 조성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민자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민교육이 중요해진다.

지금까지 국내 이민문제 전문가의 대다수가 이민자 지원 방안에 관심을 집중했다면, 이제 그 관심의 일부를 반이민 정서에 대한 연구로 돌릴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사회에 구성원의 3%이상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종주의나 제노포비아와 같은 반이민 정서의 기저를 이루는 이데올로기의 오류를 이해시키고, 감성에 호소하는 반이민 주장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IOM이민정책연구원, je.oh@iom-mrtc.org

주제어:

반이민(anti-immigration), 인종주의(racism), 제노포비아(xenophobia), 극우정당(far-right European), 유럽의회 선거(European Parliament election)

(투고일: 2015. 10. 26, 심사일: 2015. 11. 06, 게재확정일: 2015. 11. 24)

국문초록

유럽의 반이민 정서와 극우정당 지지율 관계 분석

오 정 은

오늘날 유럽 주요국에는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널리 형성되어 있다. 반이민 정서는 인종주의나 제노포비아에서 비롯되는데 유럽에는 이 두 가지, 즉, 백인 유럽인과 구분되는 유색인종에 대한 멸시와 이민자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반이민 정서로 표출되고 있다. 유럽에서 반이민 정서가 발전하는 과정에는 극우정당의 역할이 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던 유럽의 극우정당들은 1980~90년대에 이민문제를 당의 주요 강령으로 채택하였고, 유럽에서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의 원인을 이민자 탓으로 돌리면서 유권자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 특히 2001년 미국에서 9·11테러가 발생하고 서방 국가 사이에 이슬람교도에 대한 혐오 분위기가 확산되는 와중에, 이민자 가운데 이슬람교도가 많은 유럽에서 반이슬람 감정이 반이민 정서로 발전했고, 극우정당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공고한 지지층을 확보했다. 2000년대 이래 유럽 국가 가운데에는 극우정당이 제도권 정치 진입을 넘어 집권당이 되거나, 주요 정당의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이민자 수가 많은 국가에서 항상 반이민 정서가 강하고 극우정당의 영향력이 크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극우정당의 자극적이고 무분별한 반이민 주장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민의식이 형성된 국가에서는 이민자 수가 증가와 반이민 정서 고조나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율 증가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관찰된다.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ti-immigration sentiments
and Public support for the Far-right political Parties in Europe

Jung-eun OH

These days, there are widely spread anti-immigration sentiments in Europe. The anti-immigration sentiment generally grows from racism and/or xenophobia, and it originates in Europe from the both, as it were, the prejudice that the White is better than the Colored biologically and the fear of different peoples from Europeans. The European anti-immigration sentiment was boosted by far-right political parties. After the World War II, the far-right political parties could not wield previous influences in realpolitik for many decades, because they were ostracized from Europeans who experienced the Nazi. But the far-right parties who are adopted an anti-immigration in 1980-90s, could enlarged their influence ascribing the growth of unemployment rate during economic depression to immigrants. From far-right parties' perspective, the unemployment rate they are encountering is due to immigrants, who steal the opportunities of non-immigrants. After the 911 accident in the United States in 2001, there have been tendency of the Europeans ostracizing the Islam and suspecting non-European immigrants. The far-right political parties have been actively utilizing this suspicious atmosphere toward immigrants and increased the base of support by outrageously claiming to prevent influx of non-European immigrants. Since 2000, the far-right political parties gain more power and they become important political powers in major European countrie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emergence of far-right parties cannot be viewed as Pan-European phenomena nor as an inevitable result form the increasing number of immigrants. Proliferation of anti-immigration sentiment and social conflict with immigrants can be prevented by maturity of citizenship.